

與, 국민의당과 '협치 방정식' 고심

개혁입법·예산처리 혐의로 사안마다 협조 요청 한계 2+2·3+3 협의체 구성 제한적 연정 필요성도 제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실패와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성공 과정을 거친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의 협치 제도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치국회에서 법안 및 예산안 처리 등 원활한 정국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두 번의 인준 투표에서 절감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여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여야정 협의체'와는 별개로 국민의당과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 대표 및 원내대표(2+2) 또는 여기에다 정책위의장(3+3)까지 포함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이 기구를 통해 수시로 인사·입법·예산 문제 등을 협의하는 구상이다.

당 관계자는 24일 "인준 실패한 '김이수 방식'이 아닌 '김명수 방식'의 협치를 위해 국민의당을 파트너로 대우하면서 높은 수준의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2+2나 2+3 협의체와 같은 창의적 방식으로 양당 간 대화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명수 인준안 처리를 앞둔 지난 17일 민주당은 국민의당에 '2+2 회동'을 제안한 바 있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거부로 성사되지는 않았다.

또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당과의 정책 연합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박



추미애, 최고위 발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완주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고위전략회의에서 "앞으로 21대 국회까지는 여소야대(與小野大)란 현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건진이 국민의당 등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매년 표결할 수는 없다. 실질적으로 정책에서부터 정치연합이나 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에 사법개혁 논의 공조를 제안한 바 있는 우원식 원내대표도 지난 22일 "이제부터 공룡공약 중심의 민생현안과 국회를 발전시키고 정치개혁을 모색할 다양한 형태의 정책 협치, 정치 협치의 과제를 함께 모색해 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만약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에 이 같은 공

조 체계가 만들어질 경우 개인이나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이 틀에서 다루질 수도 있다.

나아가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책연합보다 더욱 끈끈한 '제한적 연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당에 일부 장관 추천권을 주는 등의 방식을 통해 국민의당을 확실하게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논리가 바탕이 된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지형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넘어서기 위해 이번 기회에 국민의당과 통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인위적 정계개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아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다. 또 시급했던 '김명수 인준안'이 처리되면서 한 고비를 넘긴 만큼 추동력도 많지 않다.

한 중진 의원은 "만약 김명수 인준안이 부결됐으면 국민의당과의 통합 논의가 크게 제기되면서 정계개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제 당장 급한 사안이 없어서 국민의당과의 협치에 대한 추동력도 많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국회 중 여권이 추진하는 개혁법안이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소야대의 한계가 극명하게 나타날 경우 국민의당과 관계를 원전적으로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대통령, 협치 물꼬 틀까

주중 5당 대표 회동 추진...한국당 불참 의사

3박 5일간의 '유엔외교' 일정을 마치 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에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며 '협치'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주중 5당 대표 회동 추진에 한국당 불참 의사가 드러났다.

뉴욕 방문 기간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청와대와 야당 간 경직됐던 분위기가 누그러진 데다 한반도 안보 상황과 정기 국회 현안 등을 놓고 여야를 뛰어 넘는 초당적인 협력 무드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열흘 가까운 추석 연휴가 지난 뒤에 회동이 이뤄진다면 뉴욕 방문 성과 등을 설명하는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출국 전 진정성 있게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5당이 모두 대화에 응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회동이 성사되면 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유엔외교 성과 등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정부의 대응 등을 설명하고 향후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번 회동에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도 매듭을 짓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이 회동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여전히 부정적인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변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측은 '보여주기식 회동'에는 응하지 않겠다면서 청와대의 회동 제안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는 여야의 협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제1야당이 빠진다면 회동의 의미가 그만큼 퇴색된다는 점에서 마지막까지 흥 대표의 참석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

與, 당원 권한 극대화 하나

혁신위, 전략공천 참여·권리당원 요건 완화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혁신 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 내에서 당원들이 전략공천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과 권리당원 자격취득 문턱을 낮추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지역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현직 의원들의 주요 당직 겸직에 제한을 두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원들의 참여를 늘리고 그 권한을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지도부와 현역 의원의 권한은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다.

앞서 1차 혁신안으로 자발적 권리당원 모임인 '기초협의회'(가칭) 도입을 제시한 정발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2차 혁신안 내용을 조율한다. 논의의 속도를 내 추석 전까지는 2차 혁신안을 발표하겠다는 것이 정발위의 계획이다.

특히 1차 혁신안과 마찬가지로 2차 혁신안 역시 당원 권한 강화와 지도권 내러블기를 목표로 잡고 토론을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 전략공천 제도' 등 파격적인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의견은 정발위 내에 이견이 있다는 점,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공천 방식 등에 큰 변화를 줄 경우 분란을 부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혁신안에 그대로 반영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김형호기자 khh@

여야 국감전쟁 돌입...거물급 증인 채택 예고

내달 12~31일...朴정부 국정농단·文정부 안보위기 집중 공략 국민의당, 5·18 의혹 전두환·정의당, 직권 남용 이명박 추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여야는 급속도로 다가오는 국감조사 준비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 당 별로 국감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국감전쟁' 준비에 돌입한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주요 공략 포인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국감 증인' 채택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올해 국감(10월 12~31일)이 추석 황금연휴(9월 30일~10월 9일)가 끝나고 불과 사흘 뒤에 시작되기 때문에 의원과 보좌관들은 연휴도 일정 부분 반납한 채 국감 준비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현재 '국감조사 정점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예산 쟁점 분석과 대응논리 마련, 자료 작성 등의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두 보수정권의 '적폐'를 국감장에서 날날이 드러낸다는 기조 아래 상임위 전문위원별로 국감조사 현안대응 자료를 준비 중이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세운 민주당은 이전 정부의 방종정당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면세점 선정 비리 등을 집중 공격할 전망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에 원내지도부와 각 상임위원회 및 간사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국감 대책을 논의하고, 국감 상황실도 가동할 계획이다. 한

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북핵 위협과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을 핵심 쟁점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탈원전, 공공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주요 공략 대상이다.

국민의당은 '민생·안전·안보·혁신성장·지역균형 발전'을 이번 국감에서 집중할 의지로 설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철저히 견제하겠다는 방침이며,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분야에서 발생한 인사 및 잇박자 논란, 부동산 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등을 주요 공격 지점으로 택했다.

한편 국회의 각 상임위가 25일부터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국감 증인채택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각당이 채택을 추진하는 거물급 증인에게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의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18 유혈진압의 명령자로 지목받은 전 전 대통령을 국회 증인대로 불러내 5·18 당시 발표명령을 내렸는지 여부를 포함, 37년간 풀리지 않은 핵심 의혹을 당사자에게 직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감 증인으로 불러 나올 처지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MBC·KBS 전·현직 사장 등을 주요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인사라인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라인, 또 여성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탁현민 행정관 등의 증인채택을 추진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박지원 "지방선거 당 핵심 총출동해야"

국민의당 전남도당 워크숍... "인재 영입 DJ 리터십 배워야"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지난 23일 "조순 전 서울시장, 고건 전 총리를 영입해 승리한 DJ 리터십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보성군 다비치콘도에서 열린 국민의당 전남도당 핵심 당직자 워크숍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당 사활이 걸려 있다. 당의 인력들이 총출동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달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인철수 대표의 불출마와 부산시장 출마를 제안한 박 전 대표는 "당을 살리려는 충

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또 '6·15 선언, 9·19 합의 나침반을 들고 통일로 가자'라는 주제로 특강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핵 위기 속에 대화와 인도적 지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 6·15 공동선언과 핵무기 포기과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등을 약속한 2005년 9·19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위기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며 6차 회담 복구를 강조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수시	정시
인문	신학	28	1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3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6	2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과	10	5
	실용음악학과	15	4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7. 9. 11(월) ~ 15(금) 전형일 : 2017. 9. 29(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7. 12. 30(토) ~ 2018. 1. 2(화) 전형일 : 2018. 1. 9(화)

대학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신학과(Ph.D.)	○
일반대학원	석사	목회학과(D.Min.)	○
		신학과(Th.M.)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통합예술치료학과(M.A.)	○
국제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음악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추후 공지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